

“은행서 CP 매입 시장안정… 증언펀드 출자금 위험도 하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은행장 간담회

“시장 유동성 공급 95조 계획 중 5대 은행서 90조 집행될 예정”

증언펀드 출자금 위험가중치 기준 250%→100%로 내리기로

“정부가 갖고 있는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예전처럼 한국은행이 새로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유동성이나 전신성 면에서 여유가 있는 은행을 통해 단기 금융시장 등 여러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

9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단기금융 시장에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누군가 물꼬를 터줘야 한다”며 “은행이 최대한 협조해 기업어음(CP), 자산유동화 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해 시장안정 역할을 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위원장-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은 흥국생명이 해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해외투자자금은 민감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해외의 존도가 높은 곳은 해외 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다”며 “불안이 해소되지 않아 흥국생명과 얘기해서, 근본적으로는 대주주가 증자를 해야 한다고 해서 증자도 하고, 해외투자자들의 기대에 맞게 콜옵션을 행사하는 쪽으로 대응하게 됐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이달 9일 예정된 5억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외화 신종자본증권에 대해 조기상환권(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기로 해 외와 채권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통상 국내 보험사가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은 5년 조기상환권을 설정하고 조기상환을 하기 때문에 ‘5년 만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흥국생명의 콜옵션 미행사가 국내채권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린 셈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지난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 등 5대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자산유동화증권의 부실 우려 증가로 단기자금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일시적인 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CP, ABCP, 전단체를 4조3000억원 매입했다. 머니마켓펀드(MMF)는 5조9000억원, 특은채, 여전채는 6조

5000억원 매입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시장유동성 공급(7.2조원), 채안펀드 및 증언펀드(11조원), 계열사 지원(6조원) 등 95조원의 지원계획 중 약 90조원이 5대 은행을 통해 집행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자금조달·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면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는데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유동성카버리지비율(LCR) 규제 정상화 유예, 예대율 규제완화 조치에 이어 증언펀드 출자금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 역시 250%에서 100%로 하향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공문을 송부할 예정이다.



중국 베이징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핵산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AP·뉴시스

취업자 수 늘었지만 증가폭 5개월째 둔화

통계청, 10월 고용동향

전년대비 2.4% 늘어 총 2841.8만명
도·소매업 6만명, 금융업 1.5만명 ↓

지난 달 취업자 수가 67만명 이상 늘었지만 5개월째 증가 폭이 축소되며 고용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고물가와 금리인상 등이 지속돼 내년에는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취업자 증가 폭이 더 쪼그라들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2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2841만8000명으로 전년대비 67만7000명(2.4%) 늘었다. 하지만, 증가 폭만 보면 6월 84만1000명에서 9월 70만명대로 줄어들며 5개월 연속 둔화되고 있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도 움츠러들며 서비스업 중심으로 취업자 수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도매 및 소매업은 1년 전보다 6만명 줄었고, 금융 및 보험업 1만5000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000명 등으로 감소했다.

이와 달리 제조업은 20만1000명 늘



며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거리두기 해제 후 외부 활동이 늘어 숙박 및 음식점업도 15만3000명 증가하며 6개월째 오름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46만명 늘어 전체 일자리의 68%를 차지했다. 이어 50대 14만7000명, 30대 6만1000명, 20대 2만8000명 각각 증가했고, 40대만 1만1000명 감소했다.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되며 고용률은 오르고, 실업률은 낮아졌다.

전체 고용률은 68.9%로 1년 전보다 1.6%포인트 상승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69만2000명으로 전년대비 9만5000

명 감소했다. 전체 실업률은 2.4%로 전년보다 0.4%포인트 하락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 인구는 1619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2만8000명 줄어들며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영향으로 향후 취업자 증가 폭 둔화세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올해 취업자 수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금리, 물가, 환율 등 외부요인 등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

中 나홀로 디플레… 생산자물가 ‘マイ너스’

차이나 뉴스&리포트

‘제로 코로나에’ 내수·수출 줄어
작년 10월 PPI 최고치 후 1년째 둔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가 2년 여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고 있다. 전 세계 가인플레이션으로 신음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다.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내수가 얼어붙은 데다 글로벌 수요도 부진한 탓이다.

9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PPI는 전년 동월 대비 1.3% 하락했다. 9월 0.9%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물론 시장 예상치 -1% 마저도 밀돌았다. PPI가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지난 2020년 12월(-0.4%) 이후 22개월 만이다.

PPI는 원자재·중간재 가격, 제품 출고가 등이 반영된 지표로 통상 소비자물가지수(CPI)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중국의 PPI는 작년 10월 26년 만에 최고치인 13.5%를 기록한 이후 12개월째 상승세가 둔화됐고, 결국 마이너스 구간으로 진입했다. 작년 기저효과를 감안한다고 해도 생산자물가의 하락 속도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지난달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전달 2.8%에서 상승폭이 축소됐다. 주요국들의 물가 상승률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올해 들어 내내 2% 안팎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소비자물가가 정부가 목표로 했던 3%에도 미치지 못했고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마이너스 영역으로 후퇴한 생산자물가는 올해 계속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커진 것은 대내외 수요부진이 겹치면서다. 부동산 침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내수는 위축됐고, 중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수출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10월 중국의 수출 규모는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했다. 전달 5.7%에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5월 (-3.3%) 이후 29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핀포인트자산운용 장즈웨이 수석이 코노미스트는 “발표된 경제지표를 보면 지난달 중국의 공장 및 서비스 활동이 모두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화된 방역 조치로 추가 모멘텀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단가연동 강제땐 中企 수익개선 안돼”

» 1면 ‘여야 속도내는’ 서계속

이화령 한국개발연구원(KDI) 플랫폼경제연구팀장이 지난 9월 내놓은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경제학적 논의’에 따르면 “연동제가 경제적 효율성을 어느 정도 희생하고 상생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책이 무력화되고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협상력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가연동을 강제할 경우, 원사

업자가 위험을 분담해 주는 대가로 낮은 단기를 요구하는 등 거래조건이 달라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고 취약기업이 시장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해당 연구에 대한 논평을 내고 “현재 중소기업 간 경쟁은 소위 덤플링경쟁이다. 원자재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멈출 수 없어 저가라도 수주를 받기 위해 제설까이며 기식으로 가격을 낮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혹여라도 연구자의 주장처럼 납품단가연동제를 빌미로 가격을 후려친다면 이는 제재받아 마땅한 행위”라고 반박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방향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납품 단가를 얼마나 올려줘야 하는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시행하는 단계에 들어가면 많은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 일괄적으로 연동제를 강제할 때는 많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제도 안착을 위한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